

고흥군의회의장 '건설사' 특혜 물의

'바지사장' 앞세워 군 공사 64건 수의계약...권력 남용 비난 사 '지방 의원 관련업체 지자채와 영리 목적 계약 안돼' 규정 위반

고흥군의회 송 모 의장이 수년동안 일명 '바지사장'을 두고 건설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59)에 따르면 송 의장이 군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60여 건의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불·편법으로 건설사를 경영했다.

특히 송 의장은 대리 사장을 앞세워 지난해만 21건 등 4년여 동안

64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의회에 입성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제3인 당사까지는 대리 사장을 선임해 건설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3자에게 넘겨 현재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송 의장은 "부인과 같이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의장의 직함을 가지고, 군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도덕한 송 의장의 비리를 제보한 A씨는 "송 의장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수의계약 등 공사를 수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자(송의장)에게 담보일 경우 공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군에 압력행사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제보자는 "송 의장이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 금품까지 가지고

와서 강제로 던져놓고 가버려 돈을 돌려주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2차 폭로까지 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입막음이 아닌 부동산 경매를 받은 과정에 A씨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 정당 모임서 주민 70명 '식사제공 의혹'

나주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조직책들이 주민 수 십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점심시간에 맞춰 나주 봉황면 한 식당에서 A당 조직책들이 주민 7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려한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나주시선관위에 접수됐다.

나주시선관위의 신고 내용을 입수한 경찰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식당을 방문, 주민 70여명이 모여 식사 중인 것을 확인했다.

식사자리에는 A당 소속 나주시장 출마예정자 B씨가 여성협의회장 C씨의 권유로 잠시 들러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뒤늦게 같은 당 소속의 한 시의원 출마예정자도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식당 방문에 앞서 다른 장소에서 먼저 만난 C씨가 당원 모임이 있으니 인사만 하고 가라는 권유로 못 이겨 식당을 찾았을 뿐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당 조직책 3명 등과 식당 주인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식사 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책들을 대상으로 식사비를 누가 계산 했는지, 누구의 권유로 주민들이 참석했는지, 참석 주민들의 인적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칭한 간큰 사기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장을 사칭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에 따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다음 날인 지난 3일 광주전남지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금융감독원 조모 광주전남지원장과 사무실 전화로 통화 연결이 되자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 김기식인데, 나랑 친한 서울대 교수가 호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여수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광주버스터미널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김 원장을 사칭한 발신자는 서울대 교수가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으니 만나서 도움을 주도록 조 지원장에게 요청했다.

조 지원장은 통화 상대가 반말투로 지시하듯 도움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겠다고 한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직원 2명이 잠시 뒤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발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신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착신도 되지 않았다.

조 지원장은 "통화 도중 신고를 할 것 같은 낯새를 느낀 발신자가 범행을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발신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나갔던 금감원 직원은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특정 장소에 돈을 가져다놓으라고 하거나, 만나서 전달해 달라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유형으로 파악하고 범거를 유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지난 5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광주와 전남지역 금융회사 5곳의 직원 8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제주서 열기구 추락 조종사 사망·12명 부상

제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제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1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55)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김씨는 얼굴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이 돌풍에 의한 조종력 상실로 추정했다.

갑작스런 강풍이 불자 열기구가 예정된 장소에 착륙하지 못하고 끌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 범위 확대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초 광주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광은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년 전 광주은행 채용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월8일 검찰은 광주은행 본점 내 3~4곳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 이었다.

광주은행 A 부행장보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채용절차가 끝난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부행장보 등을 진보 조치했다. 이후 A 부행장보는 퇴사했다.

이 같은 고발 내용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년 전 채용 과정에서의 또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 이외의) 일부 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독립기념관 태극기마당을 추억속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태극기 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희용 전 광주동구청장, '납품업체 뇌물' 무죄 확정

1심 징역 2년 → 2심 무죄 확정
"뇌물 제공자 진술 신빙성 없어"

구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6)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

주 동구청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대표자인 구청장으로서 물품 구매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지켜야하나 그 책무를 망각한 채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주민과 부하 공무원들의 실망과 불신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뇌물을 줬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구청장과 박씨는 서로 잘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따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이들의 관계 등 박씨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 연수 때 쓰라며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주춘정 기자

